

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

서울특별시(이하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라 한다)과 서울노인복지센터(이하“수행기관장”이라 한다)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계약은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“수행기관장”에게 위탁하고, “수행기관장”은 이를 승낙하여 “수행기관장”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 및 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.

제3조(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) “수행기관장”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」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참여자 모집 및 관리, 참여자 교육
2. 활동비·급여 지급, 참여자 자격변동, 부적격·부정수급 관리 등
3. 기타 이 사업 추진을 위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제4조(위탁의 기간) “수행기관장”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「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」 목적을 가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. 개인정보 처리 위탁 기간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.

1. 위탁기간 : 2025. 2. ~ 2025. 12. 까지

제5조(재위탁 제한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사전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“수행기관장”은 해당 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) “수행기관장”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·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7조(개인정보의 처리제한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“수행기관장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“수행기관장”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탁자에 대한 관리·감독 등) ①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
2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
3.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
4. 목적 외 이용·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
5.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
6.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장”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장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“수행기관장”을 교육할 수 있으며, “수행기관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¹⁾

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“수행기관”과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9조(정보주체 권리보장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, 정정·삭제,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.

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확인받아야 한다.

제11조 (가명정보의 처리제한) ① “수행기관장”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② 가명정보가 재색별되는 등 위험이 발생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가명정보의 처리 중지 및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.

③ “수행기관장”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및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“위탁자”에게 반납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“수행기관장”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1) 「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-6호) 및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.

⑤ “수행기관장”은 가명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다른 정보는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에는 다른 정보를 보관 등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.

⑥ “수행기관장”은 본 계약에 따른 “가명정보”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⑦ “수행기관장”은 “가명정보”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그 처리를 중단한 후 그 사실을 “지방자치단체장”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

제12조(손해배상) ① “수행기관장” 또는 “수행기관”의 임직원 기타 “수행기관”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“수행기관장” 또는 “수행기관”의 임직원 기타 “수행기관”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“지방자치단체장”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“수행기관장”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“지방자치단체장”은 이를 “수행기관”에게 구상할 수 있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지방자치단체장”과 “수행기관장”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 2025년 2월 11일 

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서울특별시
서울시장

오 세 훈 (인)



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67
서울노인복지센터
대표 전 금 숙 (인)

